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 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2015
VOL.42

01
02



新GO!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센터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팩 스 02-2110-0678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CONTENTS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5 01+02 vol.42



발행일 2015년 2월 27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임윤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Special Theme

- 04 **테마 인터뷰** 2015년 새해, 세종청사 시대를 열다
- 08 **테마 포커스**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
- 11 **테마 인포**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12 **권익위와 함께 간다**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2탄



소통 공감

- 14 **국민권의 이야기** 봄날
- 18 **현장 24시** 소통으로 꽃피울 국민 행복, 대한민국 파이팅!
- 20 **권익위가 간다** 공공 갈등을 풀어가는 최선책을 찾다
- 24 **이슈 포커스**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안전을 위협하는 창소육교를 철거하라!
- 26 **글로벌 ACRC** 권익위의 반부패·청렴 정책, 전 세계를 청렴으로 물들이다
- 28 **국민권의 Q&A**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 30 **찾민원 키워드** 광역버스 좌석제 민원, '조기 경보 A to Z'
- 34 **행복 우체통** 국민으로부터 도착한 감사 편지
- 36 **청렴 토크** "공직자의 가치 있는 인생이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행복 나눔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더 나은 쓰임' 만드는 Up-Cycling
- 42 **문화 레시피** 죽음이 곁에 있어 삶이 더욱 찬란하리라!
- 44 **똑똑! 생활법률** 설마, 내가 뺑소니라고?
- 46 **꼭 알아두세요!** 소유에서 거주로! '임대주택' 지원정책 속도 낸다
- 48 **ACRC News**
- 50 **독자 음부즈만**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5년 새해, 세종청사 시대를 열다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시기,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서대문청사를 떠나 세종청사로 이전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임기 3년째를 맞은 이성보 위원장에게 2015년 새롭게 출발하는 권익위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Q. 2015년 새해를 맞이해 위원장님께서 임기 3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부패 및 권익구제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는데, 지난 2014년의 주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주식 처벌 관행을 차단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56개의 공공기관 중 90% 이상이 권고를 이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 12월까지 941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부정수급 환수 예정액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권익 구제 분야에서는 집단민원 54건을 중점적으로 조정 해결하였는데, 이는 해결 건수 면에서 2013년 43건보다 약 26%나 증가한 성과였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경북 고령군 주민들 약 1만 3천여 명이 요청한 ‘우륵교 차량통행 요구’ 집단민원으로, 우륵교 이용 시 대구에 이르는 통행로를 12km나 단축시켜 해당 민원을 모두가 만족스럽게 해결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52개 현장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616건의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상담·처리하였고, 사회적 약자 고충민원 634건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의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 약 3,800건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약 2,800여 건의 각종 법령과 정책에 대해서만 약 10만 건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국민의 소리 연간 360여 만 건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민원이 급속히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면, 해당 기관에 ‘관심’, ‘주의’, ‘심각’ 등의 경보를 발령해 민원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민원확산조기경보제’를 도입해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등 확산 양상이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 43회에 걸쳐 경보를 발령해 민원이 조기에 해소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 구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제도개선 분야에서 휴대폰 분실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신청 등 각종 행정 편의적 신고 절차 개선을 포함해 45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 기관에 권고하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종전 72.8일(2013년)에서 68.6일(2014년)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Q. 2015년은 권익위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기존 업무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있으신지요?

지난해 12월에 이전한 이후에도 고충민원·행정심판 처리, 이동신문고 운영, 집단민원 해결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공직사회의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중단 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종합민원사무소를 설치해, 세종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민원 상담·신청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올해도 위원장님께서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바쁜 행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올해 권익위에서는 어떤 부패방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나요?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의식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해 높은 수준의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관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공직 풍토가 확립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외부 강의 대가기준 개선,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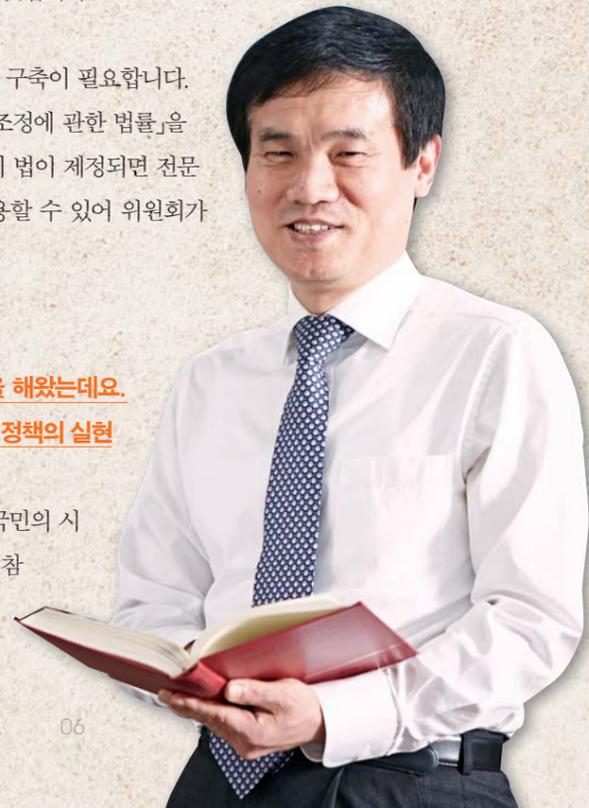
Q. 위원장님께서서는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데 현장을 강조하며,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현장 지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으신지요?

갈등이 사회의 민주화와 다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사회적 인식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집단 간의 분쟁을 잘 해결해 갈등을 우리 사회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려면,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기 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보다 모두 승자가 되는 상생의 해결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간에 신뢰를 쌓아주는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전문 조정인 제도가 도입되어 외부 전문가를 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위원회가 더욱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권익위에서는 그동안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개선 과정 전반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가칭)소통韓마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핵심 정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적극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매년 되풀이해서 겪는 불편사항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 민원예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전화 민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 전화를 '110번'으로 단일화해 전화 서비스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8개 기관에서 통합 번호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12개 기관으로 더욱 확대해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더욱더 확충하겠습니다.

Q.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올해 국민권의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는 무엇인지요?

그동안 고충민원민발분야, 부패취약분야는 물론 불필요한 규제인 손톱 밑 가시, 비정상적 관행 개선 등 다수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는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형식적 검사 문제의 개선, 어린이 놀이 시설 및 통학버스 안전 강화,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합차 범칙금·과태료 부과 기준, 각종 민원서류 반환 기준 등의 불합리한 규정과 생활용품 구입 또는 금융상품 가입 등에서 발생하는 서민경제 저해 요인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회적 약자의 고용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감정 노동자(콜센터 상담원), 공동주택단지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 등 산재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 올해로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의 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앙, 시도, 시도 교육청 등에 산재해 있어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3년부터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60여 개 위원회에 이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곳곳에 충분히 보급되면,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One-Stop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특별 행정심판 기관의 효율성을 고려한 뒤 제도를 재정립해,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을 위한 권리 구제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국민이 으뜸'이란 가치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위원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실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고민하며,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을 1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올해는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2015년 권익위의 업무계획을 살펴보자.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부정부패 척결

투명한 사회는 이제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투명성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양한 조사를 통해 증명됐기 때문이다. 스위스, 덴마크 등 나라는 작지만 투명성이

높은 나라들이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권익위의 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55.38%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3.26%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권익위는 먼저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 시작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 강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해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개혁하는 획기적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고, 청렴역량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청렴실천을 위한 '장관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부조리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갑을관계' 남용 비리,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지도층 범죄, 국민안전 저해 비리 등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부조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퇴직공직자와의 불합리한 유착 등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과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재정누수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관계부처 협업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부정청구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공공채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중심 소통 시스템과

적극적 민원 관리로 국민소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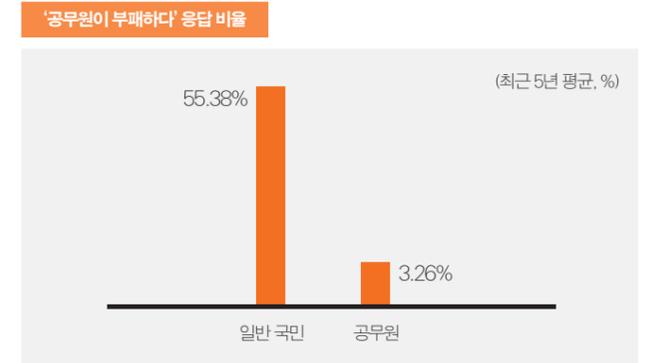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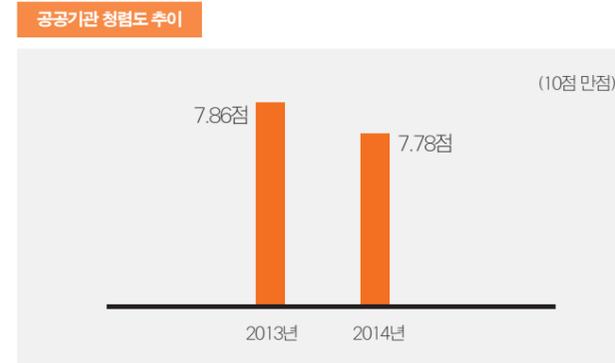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민원이 곧 국민의 소통 통로라 보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는 등 범정부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직접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가칭)소통韓당'을 행자부와 협력해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토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제안을 숙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공공토론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핵심정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자공공토론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관 간에 민원을 떠 넘기는 관행, 이른바 '핑퐁민원'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169만 건의 민원 중 약 3만 6천 건의 민원이 세 번 이상 이송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권익위는 세 번째 민원이 이송될 때 직접 나서서 처리기관을 조정하고 확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각급 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민원을 분석, 선제적으로 대처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약 400만 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악취 등 되풀이되는 생활불편 사항은 미리 예방하고, 소액결제 피해 등 급증 양상을 보이는 민원은 조기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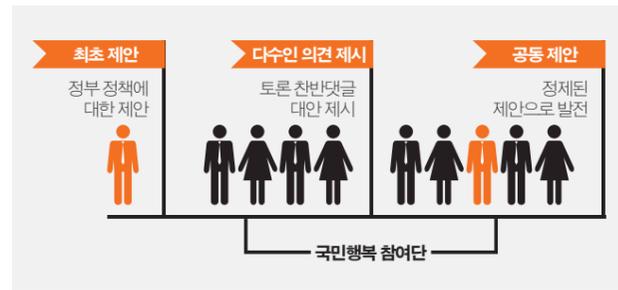
▶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과 부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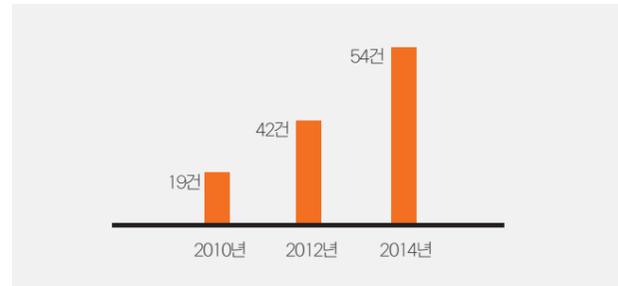
▶ 범정부 원스톱 소통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가칭)소통韓미당’ 진행 방식



▶ 집단민원 조정 건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배려해 사회적 신뢰 확충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권익위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고충 민원을 처리할 때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처리 과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계층간·지역간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갈등

해결에도 힘을 쏟아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 증진을 위해서 민원 현장 서비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운영, 재능나눔 자원봉사 지원,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등과 청렴운동 공동 추진, ‘기업 윤리의 날’ 통합 운영 등 나눔과 참여를 통한 신뢰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업, ‘부패가 없는 사회’, ‘소통이 활성화된 사회’, ‘신뢰가 충만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권익위는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업, ‘부패가 없는 사회’, ‘소통이 활성화된 사회’, ‘신뢰가 충만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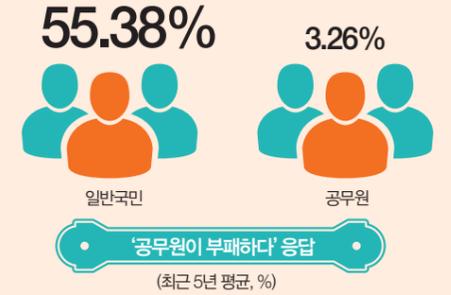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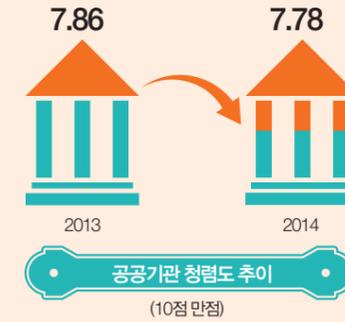
Special Theme 3

테마 인포

구성: 편집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2015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진단



처방

대한민국의 청렴, **공직사회**로부터



▶ 고질적 청탁·금품수수 관행 근절

✓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청렴문화 조기 정착

▶ 고위공직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청렴서약, 건전한 경조문화, 직무 관련 강사로 안받기 등

✓ (가칭) ‘장관행동강령’ 제정 추진

▶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 모든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고위공직자 청렴역량 평가모형 개발, 권익위 시범 적용 후 확산 추진

갑을 관계가 없는 **민생**이 안정된 사회



▶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 개선

✓ 갑을관계를 이용한 부당특혜, 편의제공 등

▶ 국민안전 저해분야 부패 척결

✓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 시설안전분야 개선 등

▶ 부패유발 규제 개선

✓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괴리되어 지키기 어려운 규제 집중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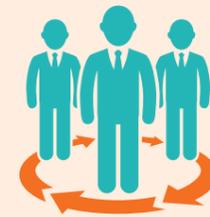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 척결

▶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 관행 개선

✓ 일감 몰아주기, 입찰 시 퇴직자 단체에 유리한

평가항목 설정 등



국민의 혈세,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 재정누수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 임대형 민자사업(BLT), R&D 등 낭비요인 개선

✓ 부정수급 관련 자료 공유,

보조금 누수방지에 실태점검·수사집중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본격 운영

✓ 복지·비복지 분야를 망라한 통합 신고처리 허브시스템 구축

▶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징벌적 환수제도 도입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지난해 권익위는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엽서 한 장이 연탄 한 장으로 바뀌어 우리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새해, 권익위는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2탄>을 시작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는 모두 1,765장의 연탄이 성북구 북정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되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728통의 엽서와 온라인 SNS에서 1,037명의 '좋아요'가 모인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도 힘을 보태어 직원들이 직접 연탄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가 배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새로운 나눔 프로젝트 2탄을 준비했습니다. <국민권익>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는 애독자들의 마음에 보답하고, 더불어 그 온기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전해주고자 합니다.

권익위는 매달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지원해주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어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힘이 되어 드리는 것이지요. 여기에 독자 여러분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적어 엽서를 보내주시면, <국민권익> 편집실에서 이를 모아 엽서 한 장당 일정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한 모금액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동신문고에서 만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지원금에 보탬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정성이 모인 지원금과 도움을 받은 이웃들의 사연은 매 호 <국민권익>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015년 한해 동안 진행될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2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나눔, 어렵지 않아요!

- 1  <국민권익>을 읽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 2  독자 의견도 적은 후 우체통에 쏙
- 3  도착한 엽서 수만큼 지원금이 모여요
- 4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만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5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국민권익>에서 만나세요

소통 공감

- 14 **국민권익 이야기** 봄날
- 18 **현장 24시** 소통으로 꽃피울 국민 행복, 대한민국 파이팅!
- 20 **권익위가 간다** 공공 갈등을 풀어가는 최선책을 찾다
- 24 **이슈 포커스**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안전을 위협하는 창소육교를 철거하라!
- 26 **글로벌 ACRC** 권익위의 반부패·청렴 정책, 전 세계를 청렴으로 물들이다
- 28 **국민권익 Q&A**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 30 **핫 민원 키워드** 광역버스 좌석제 민원, '조기 경보 A to Z'
- 34 **행복 우체통** 국민으로부터 도착한 감사 편지
- 36 **청렴 토크** "공직자의 가치 있는 인생이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소통 공감
국민권의 이야기

글:
윤이경

일러스트:
김예은

정수는 공장입구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말없이 앞서가는 정수 뒤를 석이와 용문이
가 따라갔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면 늘 가는 코스다. 쇠도 씹어 먹을 나이에 공장에서
쇠를 가는 일을 하니,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팠다. 며칠 사이에 날이 많이 풀렸다. 알량한 봄이 사거
리 편의점을 지나 바빠 사라지고 있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행정심판

봄날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료, 삼인방

편의점에는 먼저 온 공장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모두 회사 이름이 새겨진
남색 점퍼를 입었다. 여직원들은 디저트 삼아 과자봉지를 끼놓고 저희끼리 수다를 떨고
남직원들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중이다.

정수는 커피와 삼각김밥, 어묵 따위를 사 들고 와 테이블에 앉았다. 석이가 정수가
사온 어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뜨끈하게 데우는 동안 용문이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한 달 담뱃값도 만만찮은데 이참에 끊지 그러냐.”

석이가 삼각김밥을 포장을 뜯어 정수에게 내밀며 말했다.

“새까, 나도 사치 좀 하자.”

용문의 말에 석이는 별 대꾸가 없다. 용문이가 한 달을 벌어 저를 위해 쓰는
거라곤 그것뿐이란 걸 아는 탓이다. 셋은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쓴다. 급할
때에는 속옷까지 빌려 입는다.

“담배 끄고 이거나 먹어라.”

정수가 왼손에 든 삼각김밥을 용문이에게 내밀었다.

“너나 많이 먹어. 부지런히 먹어줘야 빨리 팔이 아물지.”

용문이가 입에 담배를 문 채로 어묵그릇을 정수 쪽으로 밀었다.

정수가 온전치 않은 오른팔을 으쓱해보였다. 괜찮다는 뜻이다.



갑작스런 산재로 몸져눅다

정수는 ○○에 있는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 공장으로 옮겨왔다. 회사가
제2공장을 내면서 숙련공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수는 금속가공 기계를 작동해
성형, 가공하는 일을 한다. 공장 안에서는 하루 종일 기계소리가 귀를 찢고 철가루가
날아 다닌다. 용문이와 석이도 정수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 그날 압력밥솥
완제품 수습 개가 정수에게로 쏟아져 내렸을 때, 바로 곁에서 본 사람도 두
사람이었다.

정수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부터 다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제일 많이 다친
곳은 오른쪽 옆구리와 팔이었다. 갈비뼈가 5개나 부러지고 오른쪽 손목과 엄지손가락,
팔꿈치가 골절됐다. 코도 골절됐고 이마와 머리도 성치 않았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만 12가지였다. 정수는 사고 난 다음날 수술실로 옮겨져 손목과 팔꿈치 뼈에
20cm의 고정판을 박았다.

“미안하다…….”

면회 온 석이와 용문이는 마치 제가 잘못해서 정수가 다친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무지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귀신도 모르니 미치겠다.”

용문이는 면회를 와서도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꺼냈다. 석이가 담뱃갑을 통째로
빼앗았다.

작업장의 기본 수칙은 정리 정돈이다. 완제품과 부속품을 별도 상자에 담아 가지런히
쌓아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날 완제품을 쌓아두는 과정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니 모두의 잘못이 되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두 사람만큼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댄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 마라.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서류를 챙겨 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빨리 나아라.”

서서히 회복기에 접어들고, 산재보험금도 타고...

시간이 지나자 다른 곳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오른쪽 팔의 회복 속도가 더뎠다. 아직도 팔이 30도 정도 밖에 안 펴지고 구부리는 것도 95도 정도 밖에 안됐다. 손목과 엄지 관절도 성치 않았다. 담당 의사가 통원 치료를 하면서 재활운동을 해보라고 했다. 용문이과 석이는 약속한 대로 일일이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목격자 진술서를 받았다. 초진 소견서와 X-ray, CT, MRI 등 필름과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해줬다. 덕분에 산재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을 받은 뒤 정수는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에는 회사 복직이 어렵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정수가 퇴원하기 전에 직접 공장장이 병실로 찾아왔다.

“당장 현장에 복귀는 못할 테니,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길 기다려보자”고 했다. 정수는 회사의 배려가 고맙기만 했다.

막상 출근을 해보니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었다. 기술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무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죽을 맛이였다. 서무직원인 소리 씨 옆자리에 앉아 눈치만 보는 중이었다.

용문이가 삼각김밥을 제 입으로 가져가 우물우물 씹었다.

“팔도 다 나아가는데 요새 왜 기분이 그 모양이나?”

“알 것 없어.”

“오호라, 비밀 생겼잖아? 김 양, 최 양, 박 양과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 슬슬 비밀이 생겼잖아? 너 혼자 꿀 재미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

캔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끼리 깔깔대는 여직원들을 흘깃대며, 용문이가 있지도 않은 생짜를 썼다.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나 봐.”

우연히 접한 근로복지공단의 통보

석이의 성화에 정수가 무겁게 입을 뗐다. 정수가 사무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아침 청소와 팩스와 복사기 주변을 정리 정돈하는 것이었다. 파지를 정리하다 우연히 서류를 봤다. 산업재해에 관한 서류였다. 혹시나 해서 펼쳐 보니 정수에 관한 서류였다. 정수가 재해 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회사에서 물어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였다. ○○ 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 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으니 산재보험 급여액의 절반을 징수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었다. 정수에게 징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수의 과실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마음이 가벼울 리 없었다.

“신경 꺼.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는 네 몸이나 걱정해.”

용문이가 어묵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석이도 별 말 없이 먼 곳을 바라봤다.

행정심판으로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

“본의 아니게 그쪽 하는 말이 다 들려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서무직원인 소리 씨였다. 당돌하게 반말을 하는 게 어이없어서 셋은 명 하니 소리의 입만 바라봤다.

“얼마 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거든. 여러 가지 정황 상 회사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그러니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결했다는 말씀. 그쪽은 열심히 내 일만 도와주다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얘기가. 이 밥통아!”

“밥, 밥통?”

세 사람 눈이 동그래졌다. 정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용문이와 석이는 초면인 처지다.

“애들아 가져!”

세 사람이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소리가 여직원들과 함께 휙 돌아섰다.

“밥통은 누가 밥통? 잘 처리됐다는 말만 해주면 될 거 가지고…….”

말투와는 달리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공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에 봄 햇살이 흐드러지게 쏟아졌다.



Case Information

○○광역시에 소재한 금속 제조업체인 A회사는 ○○군에 별도 산재 보험 성립 신고 없이 제품을 제조하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 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사업의 유기적 결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소통 공감
현장 24시

글.
전채련 기자

사진.
정준택 (fun studio)



국민을 살뜰히 돌보는 참 공무원 되기!

권익위로 부처를 배정받고, 설렘 반 두려움 반 풀기해진 마음으로 조직도를 보던 때가 벌써 오래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민신문고'란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을 총괄 관리하며 민원 외에도 국민행복제안, 정책토론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역할을 해내는 과입니다. 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민원 내용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치시거나, 요지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20~30페이지가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하시는 민원인들, 민원 이송 문제로 화를 내시는 공무원들로 인해 정말 저도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들의 말을 누가 한 명이라도 듣고 공감해주길 바라셨겠지'란 혼잣말을 되뇌며, 때때로 얼굴을 붉혔던 스스로를 반성하곤 했습니다. 2015년은 국민신문고가 국민과 함께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명감, 책임감과 함께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참 공무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과_김설희 새내기 공무원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겠습니다!

2015년을 권익위의 블로그 기자로 시작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권익위는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로그 기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중요 역할을 맡게 되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콘텐츠 기획과 취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알리고, 고충 해결 절차 또는 실제 해결 사례를 웹툰이나 동영상상을 활용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등 국민들이 권익위가 하는 일에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블로그 기자단은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저도 그리고 제 기사를 읽게 될 국민들도 권익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 블로그 11기 기자단_유진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4학년)



청렴문화로 행복해질 대한민국!

청렴연수원에서는 공직자들이 청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던 2014년, 교육이 끝나기 전 작성하는 설문지에는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25년 공직생활 중 이런 교육은 처음이다"란 멘트를 적기도 하고, 이러한 교육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변화는 모두 지난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청렴과 문화를 결합시켜, 공직자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렴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례를 상황극으로 표현하고, 기존의 노래 가사와 판소리 내용에 청렴 메시지를 담아 공연도 했습니다. 2015년, 이러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토대로 청렴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직자들이 저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청렴교육"을 더욱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_김일문 주무관

2015 권익위에 바란다

국민에게 권익위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평범한 직장인인 저에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존재는 희미했습니다. 그건 아마 저 말고 다른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분쟁을 조정할 만한 일이 필요 없었다는 것은 참 다행이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권익위가 뭐하는 곳이지?'란 질문은 결코 가볍게 던질 물음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권익위 당사자는 이 물음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매일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권익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도 '나' 개인의 권익은 지켜졌지만, 언젠가는 운 나쁘게 그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자리잡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회 이름 제일 앞에 달고 있는 '국민'이란 두 글자를 잊지 않고, 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멋진 기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최대규_회사원 (강남구 신사동)



국민들 삶의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셨으면...

사실 저도 국민권익위원회란 단어에 생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시행하고 추진한 정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얼마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불량 화장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특히 이 뉴스는 저에게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화장품의 겹포장(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헤아려 대책을 내놓아 주셨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수밖에요. 이 뉴스를 통해 권익위에 대해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가 국민권익을 위해, 아직 발견되지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 하나 살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혜림_영어강사 (강남구 역삼동)

소통으로
꽃피울
국민 행복,

대한민국
파이팅!!!

지난 2014년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2015년을 만들고자, 권익위는 각 분야에서 국민 권익위원회의 이상적인 내일을 만들어 가는 직원들의 당찬 각오와 희망을 들어보았다. 더불어 국민들과의 뿌리 깊은 소통을 위해, 진짜배기 삶의 현장을 찾아 권익위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진솔한 목소리로 들어보았다. 2015년에도 국민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랑스러운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궈낸 경우에는 사회 현안과 관련된 갈등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46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 바로 권익위의 현장조정회의이다.

집단민원 현장조정 히스토리

공공 갈등을 풀어가는

최선책을 찾다

2008년 첫 현장조정회의부터 이어온 집단민원 조정

국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해결해주는 것이 권익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러한 고충민원 해결 역할이 최근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한 개인의 민원에서 더 나아가 한 마을, 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다수가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경우 정부기관,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침해, 불편사항 등이 많아 단순한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상호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조정자의 역할을 권익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갈등은 군 비행장 이전 사업 등 대규모 공익 사업이 이뤄지는 곳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권익위는 집단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전문 조사인력들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현황을 파악하고, 민원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의견을 들으며 중재안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발로 뚫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중재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현장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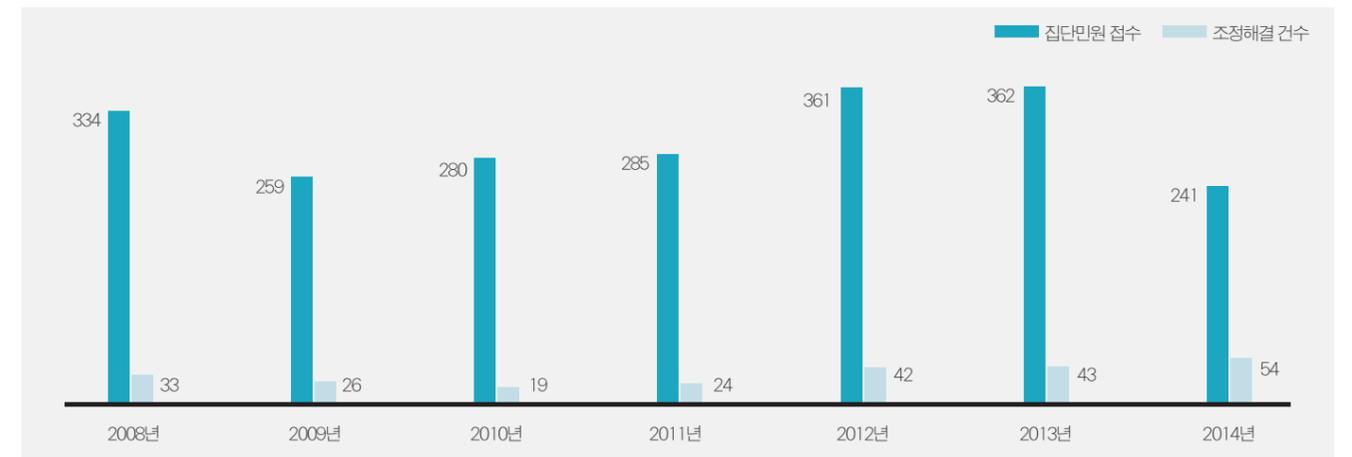
권익위 출범 후, 최초의 현장조정회의는 2008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소음 집단민원 사례다. 당시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로 인해 극심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던 인천 학익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 당시 이동식 방음벽과 분진망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권익위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들의 주택을 매수하도록 중재하도록 해 원활한 공사 진행과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권익위의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이 중 연평균 31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2014년 54건의 집단민원 조정 성공

2014년에는 241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었고, 총 54건이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4월 열린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집단민원 조정'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문제가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빗물과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악취가 심해 1998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2년 뒤 도시계획에 부딪쳐 중지됐다. 이후 지자체와 꾸준한 협의 끝에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감사원의 감사처분으로 인해 다시금 표류하게 됐다. 감사원은 학익유수지 일부를 물류단지시설 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하더라도 당초 유수 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 집단민원 추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처분을 내려 전면 중단됐다. 이에 2013년 인천 남구 주민 2,600여 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적극 청취하고, 인천광역시와 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무조정실까지 다양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낼 수 있었다. 학익유수지 우수용량 유지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이행추진 하는 방향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우륵교 교통난 해소 집단민원 조정'은 두 번에 걸친 조정이 이뤄진 독특한 사례다. 우륵교는 강정고령보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2차선 교량으로, 고령군이 차량통행을 요구했지만 달성군이 이에 반해 고령군 주민 1만 3,000여 명이 청와대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고령군과 달성군의 의견을 토대로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 후 달성군 의회가 이 안전을 반대하면서 전면 무산됐다. 권익위는 다시 협의에 들어가 차량통행 대신 다사-다산간 광역도로 개설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집단민원 조정에 있어 상호 이해와 조정, 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제적 대응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중

이처럼 집단민원 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전문적

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체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권익위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등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된 뒤에야 수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과 사전조사를 통한 조정 등을 중심으로 했다. 집단민원조정법은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나 불편에 대해 100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를 '집단민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재할 전담 조정인을 두도록 했고, 행정기관도 권익위에 집단민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조정인에게는 서류제출·의견진술·감정의뢰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며, 당사자들이 조정을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로 규정해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더라도 주요 집단갈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조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청회 개최 등 학계 및 유관기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 발전은 물론 국민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갈등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달려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집단민원 조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14년 주요 집단민원 조정 사례



① 4월 10일 >>

학익유수지 환경개선 사업 집단민원 조정
 • 신청인 : 인천 남구 주민 2,600여 명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인천 남·중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② 6월 25일 >>

구미 상미구교 확장 집단민원 조정
 • 신청인 : 구미시 상모사곡동 주민단체 7개
 • 피신청인 : 구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③ 9월 11일 >>

우륵교 교통난 해소 집단민원 조정
 • 신청인 : 고령군 주민 1만 3,048명
 • 피신청인 : 고령군, 달성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숫자로 보는
현장조정회의

246조 원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7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이며, 이에 따른 경제손실은 연 2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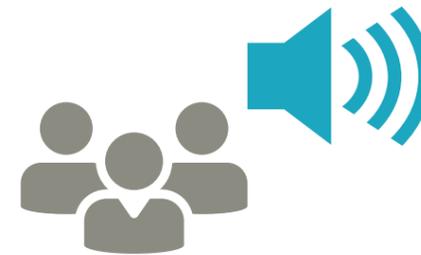
137.5일

집단민원은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조율하고 처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 2013년 조정해결된 43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7.5일로 고충민원 처리의 7.6배가 소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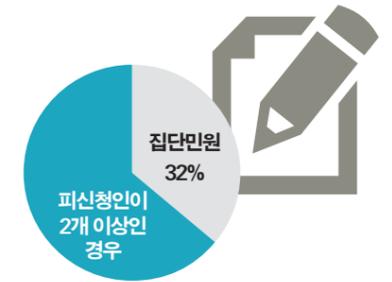
2008년

권익위 출범 후, 최초의 현장조정회의는 2008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소송 집단민원 사례로 당시 인천 학익동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 권익위의 중재로 현장조정이 이뤄져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뤄졌다.



107건

2008년 이후 조정된 187건의 집단민원 중 피신청인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57%인 107건에 달한다. 관계 기관(관련 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집단민원도 전체의 59건인 32%이다.



1,881건

2008년 권익위 출범 이래 2013년까지 제기된 집단민원은 모두 1,881건에 달한다. 이중 187건이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27%

200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고충민원은 3만 2,351건에서 3만 1,681건으로 -2% 줄어 들었지만, 집단민원은 285건에서 362건으로 27% 늘어났다.



예산군 창소육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현장조정회의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안전을 위협하는

창소육교를 철거하라!

국민의 고충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조정회의. 권익위의 올해 첫 현장조정회의가 지난 1월 23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렸다. 장항선 철로와 국도21호선이 교차되는 부분에 조성된 과선교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됨에 따라 철거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 권익위는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관계 기관과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방치된 과선교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

한적한 국도변, 옛 장항선 철로길이 널찍한 농지를 가로지른다. 철로길 자리와 국도21호선이 교차하는 곳에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온 '창소육교'가 있다. 지난 2008년 장항선 선형개량 공사가 완료되면서 창소육교 아래를 지나는 철로가 철거됐고, 그때부터 동네의 경관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창소육교가 오늘은 사뭇 다르다. "철로 없애고 나서 그냥 방치하더니 이제 싹 다 치웠네." "진작 이걸 없앴어야지, 길이 없으니 먼 길로 돌아서 건너가야 되잖아."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골치를 썩이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후련함과 기쁨이 가득하다. 창소육교를 사이에 두고 간양리와 궁평리가 단절돼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길을 건너다가 생기는 교통사고 위험도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주민들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발빠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의결하는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창소육교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제 맘 놓고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최상태 주민 대표는 '이번 조정협약이 이뤄져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다'고 덧붙인다.

조정안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과선교 철거를 위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에 재산관리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군은 과선교 철거와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단계가 되면 예산 문제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왕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부탁에 권익위 이정보 위원장도 '권익위도 이 합의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독려하겠다'고 화답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해결이아말로 국민행복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갈등의 현장,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권익위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권익위의 반부패 청렴 정책, 전 세계를 청렴으로 물들이다



국제협약 이행을 시작으로 반부패 우수 사례 세계로 전파

권익위는 전 세계 173개국이 가입한 UN반부패협약의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뤄진 1주기 심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연계해 올해는 부패 예방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2주기 심사를 치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무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OECD 외국뇌물방지협약(OECD 회원국을 포함해 40개국이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의 이행을 위한 국가별 상호 심사(peer review)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G20 반부패 행동 계획 및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등 전 세계 반부패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우수 반부패 제도 및 기술을 개도국으로 전파하는 사업과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 WB)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반부패 우수 사례를 더욱더 확대 수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MOU를 체결한 아시아 4개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을 대상으로 반부패 워크숍 및 현지 컨설팅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가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남미의 반부패 기구 실무자들까지 대상을 보다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권의 보호와 반부패·청렴 정책을 확산시키려 여러 모로 애써왔다. 더욱이 2014년에는 아시아 옴부즈만(AOA) 이사회 및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물론, 국민신문고 등 우수 옴부즈만 정책과 제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한 바 있다. 이에 2015년에도 지난 성과를 이어받아 활발한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권익위의 우수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다 드높여 나가고자 한다.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권익위의 정책 및 활동 적극 홍보

권익위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세계 반부패 기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협력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국제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의 이사국으로서 옴부즈만·반부패 관련 국제협력의 중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의 이사회와 총회에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운영 성과를 브리핑하는 등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국민신문고(E-people)의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의 옴부즈만 MOU를 통해 재외 국민의 권익 증진을 다각도에서 도모하고, 권익위 자체의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 옴부즈만의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며, 또한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인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지원하며, 권익위에서 발행하는 영문 권익 백서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권익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2015년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사업 일정

일시	회의 및 협력사업명	장소
1.26~28	APEC 제20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워크숍	필리핀 클라크
1.29~30	UNDP 반부패 국제회의	서울
2.26	주한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	서울
3.4~6	'15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이스탄불
3.10~13	OECD뇌물방지작업반회의 (그리스 3단계 재심사 보고)	파리
3.29	IOI 아시아 지역회의	태국 방콕
3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	비엔나
3월	제2차 한-영 반부패 세미나 및 유럽지역 청렴정책설명회	런던, 유럽
5.11~20	제3차 외국공무원 청렴교육과정	서울, 청렴연수원
5월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 및 워크숍	미정
6.1~5	제6차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회의	비엔나
6.16~17	'15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워싱턴
7월	KOICA '몽골 부정부패 영향평가 역량강화 과정' 연수	청렴연수원
7월	태국 부방위 대상 청렴도측정 연수	세종
8.31~9.2	제6차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비엔나
9.21~23	IOI 이사회	나미비아 빈트후크
9월	제8차 반부패기관장회의 및 제16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	비엔나
9월	제20차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몽골 울란바토르
9월	APEC 제21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워크숍	필리핀
10.13~16	OECD뇌물방지작업반회의 (뉴질랜드 서면보고 심사)	파리
10월	인도네시아 부방위 직원 연수	세종
10월	'15년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파리
10월	유엔부패방지협약 제6차 이행점검 그룹회의	비엔나
11.24	IOI 아시아 지역회의, AOA 총회 및 컨퍼런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12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4차 당사국회의	미정
하반기	유엔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상트 페테르부르크
12월	한-인니 반부패 협의회 및 현지 기술지원 컨설팅	인니 자카르타
하반기	한-몽골 반부패 협력회의 및 워크숍	몽골

정리.
전채련 기자

일러스트.
양승용

한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자 늘 노력 중인 권익위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사례를 통해 국민권익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6년 전 기록 찾아 고교 졸업 입증해,
마침내 이룬 만학의 꿈

Case

요양보호사로 일해온 Y씨는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려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입학이 불가했다. Y씨는 1970년대 서울 명동에 있던 중앙상업전수학교에 들어갔고, 3학년 때 천호상업전수학교로 전학해 졸업을 했다. 천호상업전수학교는 1983년 위례상업고등학교로, 2007년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 그러나 종전 학사 기록을 갖고 있던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는 Y씨의 생활기록부와 공납금 수납부만 남아 있었고, 졸업대장에는 Y씨의 이름은 없었다.

Solution

권익위는 폐교된 중앙상업전수학교의 기록물을 찾아 다니며,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 남아 있었던 Y씨의 생활기록부, 천호상업전수학교에 공납금을 납부한 것, 천호상업전수학교 졸업앨범에 Y씨의 사진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담임교사와 동창생 50명도 Y씨의 전학과 졸업에 대해 같은 진술을 한 점, 학적 관련 공공 기록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조치를 권고했다.



잘못 결정한 산재보험,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꾸는 것이 마땅

Case

A회사는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산재보험 신청 시, 사업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으로 적용받았다. 그런데 실제 사업 내용이 산재보험의 항목과 달라, 산재보험의 종류를 바꾸고자 근로복지공단에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 세목인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제조하는 연료탱크가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굴삭기나 지게차에 사용되는 A회사의 '연료탱크'는 굴삭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업종류에 시표상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즉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작업과정뿐 아니라 경제 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 제품 및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회사는 보험료율을 '21/1,000'로 낮추어 산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공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도 조합원으로서 자격 인정

Case

부산 A주택재개발조합과 연제구는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일부는 오피스텔) 44세대 가운데, 인가일 이후에 경·공매로 낙찰을 받은 28세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의 자격을 주지 않았다.

Solution

권익위 조사 결과, 경·공매 입찰 당시 현황조사서에는 재개발 추진에 대한 공지사항이 없었고, 조합 운영도 유명무실했다. 또한 이들 28세대는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도 세대 분할이나 조합 설립 이후 주택 양수 등을 막고자, 2009년 2월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라도 적절한 경·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화장품의 겹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할 것

Case

가정주부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였다. 그런데 집으로 배송된 후 확인해보니, 화장품은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라 교환 또는 환불을 하려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포장을 개봉한 상태라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Solution

현행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살펴보면,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 의무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화장품의 겹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 반환 및 환불 등 여러 민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클.

윤진아가자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입석금지 시행 이후 이틀간 겪은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8월까지 한 달 동안 모니터링 후 차량 추가 등 대책을 결정하겠다는데, 한 달이나 이런 불편을 계속 겪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요?"
(2014년 7월, 수원 박 모씨)

"입석금지 이후 광역버스를 타려면 최소한 40~5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환승 할인 제한 시간(30분)은 그대로여서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니 제한시간을 연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성남 권 모씨)



"버스를 증차했다지만 기점에서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로라서, 차고지와 먼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간 기점에서 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세요"
(2014년 7월, 용인 박 모씨)

"좌석제 시행 이후 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배차간격이 긴 버스를 이용해야만 해 출근길 불편이 커졌습니다. 노선 변경 시 정확한 실사를 통해 기존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2014년 7월, 구리 조 모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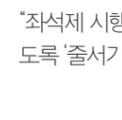


"한동안 좌석이 다 차면 입석으로도 탈 수 없게 하더니, 오늘(7/21)은 좌석이 다 차는데도 승객들을 태워 고속도로를 서서 가야 했습니다. 제도 시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건가요? 국민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입석운행, 확실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수원 한 모씨)

"버스 증차 때문인지 버스전용차선이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도로가 막혀, 차를 끌고 출퇴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4년 7월, 남양주 김 모씨)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할 때 평소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분인데, 버스를 기다리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졸속 행정으로 무작정 좌석제를 전면 시행하면, 우리는 그냥 정부의 정책을 속수무책으로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2014년 7월, 수원 전 모 씨)



"좌석제 시행 이후 버스를 먼저 타려는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탈 수 있도록 '출서기 표시판' 등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인천 이 모씨)



"광역버스 좌석제가 시행되면서 경기9***번 버스가 기존 8대에서 14대로 증차한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시행일 이후 이틀간 증차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니, 조속한 증차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7월, 용인 김 모씨)



광역버스 좌석제 민원, '조기경보 A to Z'

삐뽀삐뽀~
민원 확산
조기경보제



지난해 4월 23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일시 시행' 당시 한동안 폭증했다가 감소했던 관련 민원이 '7월 광역버스 좌석제 전면 시행'이 예고되면서, 눈에 띄게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면 시행일(7/16) 이후에는 다양한 민원 사례들로 혼란을 빚어, 권익위는 이를 뿌리부터 해결하고자 '민원 확산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후, 불편 민원 속출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이후 일주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314건이었다. 민원 접수 기관은 경기도 용인·수원·남양주·광주·성남·구리 등 신도시 밀집 지역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등이었다. 용인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남양주, 광주, 성남, 구리, 서울, 시흥, 인천, 고양시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민원의 주된 유형은 버스 증차 및 실질적 불편 개선 대책 마련 요청,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제시, 좌석제 시행 재검토 요청, 기존 버스노선 변경 이의, 입석 운행 단속 요청 등이었다.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린 '민원 확산 조기 경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사전 예고 없이 4월 23일 갑자기 금지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굉장한 혼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 대책으로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전까지 안전운행 홍보·계도 기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일시 시행 조치 중단 후 점차 감소(5월 50건)했던 광역버스 관련 민원은 광역버스 좌석제 전면 시행이 예고된 7월 들어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시행일인 7월 16일 이후에는 민원의 증

류 및 건수가 급속히 증가(346건)했다.

권익위는 민원이 단기적으로 급증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서 불편해소 대책이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7월 23일 관심(1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발령 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불편 관련 민원은 346건→122건→49건→31건으로, 3주 연속 민원 감소세를 보여 8월 13일 해당 경보를 해제했다.

향후에도 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민원 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확산 조기 경보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불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약



2014년 7월 23일 '심각' 경보 → 2014년 8월 13일 해제

※ 좌석제가 시행된 7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7월 23일 '심각' 경보 발령 후 증가세가 진정되면서 3주차 이후 감소 시작

2015 국민신문고가 분석한 설 전후 주요 민원 사례

체불 임금 > 쓰레기 처리 > 원산지 표시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체불 임금을 받아 달라' 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년간(2012~2014년) 설날 전후 15일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명절 고충·민원 2432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 체불'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1,139건(4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이 1047건(43.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이 246건(10.1%) 순이었다. 임금 체불 민원의 경우 제기 건수가 2013년 3.9%에서 2014년에 7.5%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체불 임금의 규모는 기간 기준으로 '1개월~2개월 미만' 분(35.4%)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미만' 분(32.8%), '2개월~3개월 미만' 분(14.5%)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현장 종사자가 28.1%, 병원 종사자 4.8%, 제조업체 근로자 4.8%, 기타 회사원이 51.4%였다.

한편 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과 관련해 2월 22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 표시하는 행위, 위해 식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을 우선 투입해, 이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해당 조치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판매자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설 연휴 주요 민원, 3가지를 살펴보면...



"공사현장 하도급업체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저를 포함해 7명의 근로자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일한 인건비를 받지 못해 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에 사정을 얘기했지만 대책이 없고, 원청업체에서는 줄 돈이 없다며 모른 척하고 있으니 꼭 좀 도와주세요!"

"설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변경 안내 전단지 받지만, 문의할 전화번호도 없어 난감했습니다. 변경 일정에 따라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지정 시간에 수거되지 않았더군요. 집안으로 도로 가져와 정상 배출일에 다시 내놓았지만, 다음 날 오후까지도 치워가지 않아 매우 불쾌했습니다. 조속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설 차례음식을 준비하려고 시장을 갔더니 원산지 표기가 너무 엉망이네요.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표기도 안 해놓고, 사려고 하면 무조건 국산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표기를 잘하는 모범업소는 인센티브 주고 불량업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부터 도착한 감사 편지

권익위의 추진력,
조정력으로

기업과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자동차 중고부품과 중고자동차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주)세종의 박○○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저희 (주)세종이 제기한 사업부지 조성 민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세종은 해당 민원의 해당 부지가 약 30m 높이의 고속도로 비탈면에 접해 있고, 20m 폭의 접도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부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년간 시간적, 재정적 부담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고심하던 가운데 권익위에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권익위에서 수 개월 동안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산업단지의 경우 접도구역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저희 (주)세종과 협의해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개발 효율성의 극대화와 고속도로 비탈면 유지 관리 비용의 절감, 미관 향상 등을 위해 비탈면 절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을 설득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주)세종의 중고차 재활용 산단 조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재정적, 시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그러나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충남도, 공주시, 도로공사가 조정·합의해 민원이 해결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권익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정권의 국정 핵심 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이 권익위의 주도적인 규제 개혁 실천을 통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저희 (주)세종이 겪어온 고충민원과 비슷한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주)세종의 민원이 풀린 것처럼 권익위와 행정, 기업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고질적인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행정과 기업은 '상생'의 정도를 넘어 '공생' 혹은 '동업'의 일체감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권익위의 중재는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한 성공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례에 나타난 권익위의 모범적인 적극성, 추진력 그리고 조정력 등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에 널리 전파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익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13일
(주)세종 대표이사 박○○ 올림

권익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권익을 더욱 철저히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통해 오랜 고민과 걱정거리를 해결하신 국민 여러분들은 이번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 독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든든한 국민들의 지원과 응원에 힘입어, 2015년에도 권익위는 국민권익의 최전선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위원장님, 조사관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토지합병 문제는 지방자치 행정상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상부 기관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민원까지 상부 기관에 진정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비능률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제출하기까지 공무원들의 시간낭비와 직무태만의 행동들을 지켜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지방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과 친절·봉사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친절·봉사 정신으로 민원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하는 직무 태만, 책임회피 등 민원인으로서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시장 결재까지 득한 사항임에도 5,6년 동안 합병이 불이행되어 정신적으로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의 사소한 일로 너무도 오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개인을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사소한 일들은 행정 능률을 위해 자치 행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직접 조사하신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아주 사소하면서도 역올한 민원에 인력낭비, 시간낭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대책이 진정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2015년 새해 건강하시고 온 가정에 축복을 빕니다.

2014년 12월 5일
신청인 한○○ 올림



제 편이 되어주신
권익위에

감사 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 자문위원, 서생현 박사

“공직자의 가치 있는 인생이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위안이 될 줄 몰랐다. 존재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대한민국 대표 청백리’ 서생현 박사를 만났다. 질문 하나하나를 골똘히 경청하고 최고의 현답을 들려주려고 애쓰는 그가 2015년 새 뜻을 올리고 있을 공직자들에게 보석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
공직자는 금전 문제나
인사 문제,
사생활에서 약점이
없어야 하고,
매사에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범이
돼야 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 청백리, 서생현 박사의 제언

‘굶어 죽을지언정 국민을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부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일평생 실천해온 서생현 박사. 그는 청렴을 향한 날카로운 잣대, 꺾일 바에야 부러지고 마는 강직함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꼬이지 않는다고 야만 게 아니라 지나치리만치 정직과 청렴을 강조하는 그를 두고 ‘적당히 하라’며 혀를 끌끌 찬 지인도 한둘이 아니다. 출세 지향주의와 금전 만능주의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이 ‘특이한’ 가치관을 어떻게 공기업 경영에 투영시킬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이들도 많다. 석탄공사 사장, 광업진흥공사 사장, 마사회 회장이

지 3개 공기업의 경영을 맡아 ‘뺨’이나 ‘연줄’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50여 가지에 달하는 마사회 개혁 작업을 이끈 뒤 “내 할 일을 다 했다”며 2000년 사표를 제출했다.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한국마사회는 서생현 식 개혁 결과, 부정부패추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마사회장으로 부임하면서 1년 안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마전’이라 불리는 마사회의 오명을 씻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분규가 끊이지 않는 노사 문제를 푸는 것이었지요. 당시 마사회는 1년에 2000여 건의 용역 및 물품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 94%에 달하던 수의 계약률을 8%로 낮췄습니다. 식당과 매점 등 마사회 임대 사업권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웬만한 ‘뺨’이 아니면 따기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의 계약 때문이라 파악했거든요.” 실제로 당시 마사회 내부 주요 임대 물건이나 경마지 같은 간행물 판매소가 모두 수의 계약으로 2·3년간 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었고, 돈이 되는 사업인 걸 귀신같이 알았던 소위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두 팔을 걷어붙인 서생현 박사는 식당 등 주요 임대 물건의 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로 하고, 매점과 간행물 판매소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비과세 대상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 규정을 바꿨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세금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국가유공자들이 임대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신문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을 진행해 컴퓨터 추첨으로 이를 배분한 일은 당시로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배고픔이 두려우면 공직을 버려라

공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부패와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초야에 묻혀 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 한가롭지 못했다. 서생현 박사는 ‘공직자의 가족도 공직자다’, ‘투명하지 않은 돈에는 꼬리표가 붙는다’, ‘공직자의 행동에는 오해의 소지조차 없어야 한다’ 등의 지침으로 공직자들에게 뜨끔한 일침을 가해왔다. “공직자는 금전 문제나 인사 문제, 사생활에서 약점이 없어야 하고, 매사에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범이 돼야 합니다. ‘철밥통’이란 별칭까지 들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인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개인적인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기업 재직 당시, 그는 인사 청탁의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여 자신



의 집에는 어떤 이유로도 찾아오지 못하게 했다. 군에 몸담고 있었던 시절, 모 장교가 진급 청탁을 위해 집으로 찾아와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슬쩍 놓고 간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서생현 박사가 바로 이튿날, 당사자를 불러 군복을 벗겨버린 일화와 모 회사 사장으로 재직 시 외부의 힘 있는 인사를 동원해 사장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모 간부를 오히려 퇴출시킨 일화 등은 유명하다. “옛날에는 굶지 않으려 부정을 한다고 변명했다지만, 지금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굶을 정도로 보수가 적지는 않다”고 강조하며,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 행위는 아무리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엄하게 처벌해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도 시급하다고 했다.

“몇 년 전 점심 약속으로 효자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옛 주택들이 거의 음식점이 되어 있었고, 집집마다 손님들이 가득 차 있더군요.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냐고 물으니, 청와대가 가까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누구와 밥을 먹을까, 그리고 무슨 말들이 밥상에서 오가고 있을까, 이것 한 가지로도 청와대의 기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기강이 이러니 전국 공직 기관의 기강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공직자라면 사적인 만남을 당연히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토록 낮은 청렴성이에요.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정이 아직도 만연하고, 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불감증 수준이에요. 이 부정 불감증을 깨끗이 완치시키려면 권익위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에게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

서생현 박사는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국가청렴위원회와 권익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공직자 ‘계몽’에 앞장서왔다. 청렴한 삶을 역설하는 그의 강연은 1천 회가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강연 요청은 끊이지 않는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안타깝게도 고위직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정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희망도 품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보겠다며 주먹을 불끈 쥔 젊은 공직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랜 시간 부정과 싸워 이긴 저의 경험을 들려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렴한 공직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고되고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빛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으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공직자라면 언젠가 정년퇴직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퇴직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공직 생활을 해 자랑스럽다’란 말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또한 공직에서 물러나던 날, 아내의 입에서 나온 “당신하고 살아보니, 청렴결백에 대해서는 참으로 국보적인 존재요”란 한마디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포상이었노라고 했다. 공직자인 자신보다 더 철저하게 공직자 아내의 자리를 지킨 당사자에게서 받은 칭찬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현대판 암행어사’란 별명답게 가는 곳마다 악습과 부정부패를 뿌리 뽑았던 그는 더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정도(正道)를 안내하며, 오늘도 마패를 하늘 높이 꺼내들 참이다.



Book Info

서생현 박사가 직접 집필한 <나는 대한민국 공직자다>

‘대한민국 대표 청백리’로 불리는 서생현 박사가 1천 회를 지나온 자신의 강연과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다. 청렴함, 전문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좋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또한 현 시대를 사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이다.

>> 책과 관련된 문의와 연락은 서생현 박사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saengsu@komet.net)

ACRC

행복 나눔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더 나은 쓰임’ 만드는 Up-Cycling
- 42 **문화 레시피** 죽음이 곁에 있어 삶이 더욱 찬란하리라!
- 44 **똑똑! 생활법률** 설마, 내가 뺑소니라고?
- 46 **꼭 알아두세요!** 소유에서 거주로! ‘임대주택’ 지원정책 속도 낸다
- 48 **ACRC News**
- 50 **독자 옴부즈만**



‘더 나은 쓰임’ 만드는 Up-Cycling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가 최근 윤리적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내키는 대로 사고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가 지구에 끼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책상에 앉아 고민하는 대신 착한 지구인들은 나부터, 지금부터 행동하는 방법을 택했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역발상

지난 연말 한 대기업이 개최한 이색 전시회가 눈길을 끌었다. 가전제품 포장용 종이박스를 활용한 대학생 디자인 전시회가 그 주인공으로, 폐종이를 재활용해 일상생활에 가치를 더해줄 제기발랄한 작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100여 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금상은 냉장고 박스를 활용해 식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작품을 제출한 참가팀에 돌아갔다. 이외에도 조명과 음향 증폭기를 결합한 작품, 아름다운 티 테이블, 어린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목마 형태의 놀이기구 등 가구부터 작은 소품까지 독창적인 작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버려진 재료에 창의력을 더해 가치 있는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단순한 재사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에서 한 단계 진보한 개념이다. 업사이클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발견과 재조합이다. 재생의 의미를 넘어 의미 있는 진화가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업사이클링으로 디자인 · 트렌드 잡은 제품들

소위 ‘신상’이 빠르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소용을 다한 물건들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다.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적 감수성은 덤이다. 소비자들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2009년 설립한 ‘에코언니야’는 1회 사용으로 소각되는 홍보용 현수막을 수거해 에코백 · 팔 토시 · 쿠션 등을 만들고 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선풍기 커버로, 기존 형질 커버와는 달리 세탁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주부들에게 반응이 좋다. 자원 재활용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은 현수막, 지하철 광고판, 자전거 타이어를 활용해 가방 · 파우치 등을 만든다. 터치포굿이 현수막으로 제작한 ‘기든포굿’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씌우는 주머니 화분 커버로, 재활용도 하고 식물도 키울 수 있는 효자상품이다. 소셜벤처기업 ‘어스맨’의 팔찌와 귀고리는 베트남전쟁 중 라오스에 떨어진 폭탄 잔해로 만들어졌다. 어스맨은 수익금의 일부를 생산자 및 마을 공동체에 기부해 경제적 자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구 브랜드들도 업사이클링에 동참하고 나섰다. ‘천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패브리커’는 폐가구에 섬유를 입힌 디자인 가구를 만든다. ‘美 cook oppa’는 충분히 멋지게 재탄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서슴없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출발했다. 영국 출신인 주인공의 색깔을 담아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Jamez Designs)으로 새 단장을 마친 각종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들은 갤러리를 가득 채우며, 바로 옆 공간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한껏 활용한 레스토랑과 팝이 자리 잡고 있어 미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면모를 드러낸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눈여겨본 기업도 있다. 가정재배버섯 전문업체 ‘꼬미농부’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버섯재배 키트를 만들어 판매한다. 하루 세 번 물을 주고 습한 곳에 놓아두면 커피 찌꺼기에서 버섯이 자란다. 버섯은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 버섯을 기른 커피 찌꺼기는 퇴비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영세 중소기업 위주이던 업사이클링 분야에 대기업들도 가세해 청신호를 보내온다. 5년 전 7개에 지나지 않던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는 작년 말 68개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코오롱FnC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RE:CODE’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폐차에서 나온 에어백, 낙하산, 폐청바지 등 다양한 폐기물을 소재로 디자인 요소를 강화한 브랜드다. 제일모직도 지난해 서울 삼청동에



‘하티스트 하우스’라는 패션 매장을 열면서 업사이클링 기법을 도입한 가방과 소품을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는 화장품 원료로 쓰고 남은 굴껍질이나 제주도 앞바다에 뒤덮인 파래 등으로 종이를 만들어 이를 제품 포장지로 쓰는 등 업사이클링의 폭을 넓히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단순 재활용 넘은 폐기물의 새로운 가능성

소각장으로 가야 할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와 디자인을 입혀 새 작품으로 탄생시킨다는 미학은 건축가들의 마음도 흔들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신 기능이나 디자인을 변형해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건축 업사이클링’ 바람도 힘차게 불고 있다.

1883년 개항으로 서구 문물이 들어온 인천은 최근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해 ‘인천아트플랫폼’을 만들었다. 중구 해안동에 건립된 건축문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을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전시장 등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1888년 지어진 일본우선주식회사 사무실은 아카이브로, 물건을 실었던 해안동 창고는 스튜디오로 바뀌었고, 철제대문으로 차가 드나들던 대한통운 창고에서는 작가들의 전시와 공연이 열린다. 그 옛날 물건을 실어 나르던 항구처럼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어 나르고 있다.

면발치에서 관망하지 않고 지구 살리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된 착한 지구인들은 버려진 폐기물로 녹색지수는 물론 디자인, 기능성까지 100점 만점인 명품을 양산하고 있다. 버려지고 사라져 가는 것들의 의미를 되새기는 생활 속 실천들이 “나는 살아있어요!”라고 외치는 생명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고 있다. 좀 더 넓은 시야로 자연의 보폭에 가까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다짐은 느리지 만 묵묵하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줄 것이다.

죽음이 곁에 있어

삶이 더욱 찬란하리라!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최근 ‘어떻게 잘 사느냐’와 함께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비극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심리적 외상을 입힌다. 분노와 좌절이 일상화되고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사회에서 잘 살고 잘 죽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늙고 죽어가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움직임이 정초 문화계를 들썩이고 있다.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할 선물 같은 작품들을 소개한다.



Book 〈아버지는 그렇게 작아져간다〉

저자 및 출판 : 이상운 (문학동네)

죽어가는 자의 곁을 지키며 내게도 닥칠 죽음을 생각하다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누워 급격히 허물어진 아버지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의 시간’을 적나라하게 경험한 아들의 기록이다. 저자 이상운은 ‘제11회 문학동네작가상’을 수상한 소설가다.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은 당사자인 아버지에게도 첫 경험이지만, 곁에서 도움을 주는 저자에게도 철저히 첫 경험이다. 3년 반의 여정을 통해 저자는 노화·질병·죽음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인간의 애처로운 모습과 늙고 병든 사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의료 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켜본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병원 침대 위가 아닌 당신의 집, 당신의 이부자리에서, 익숙한 삶의 터전과 감정적 유대 속에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직접 아버지를 돌보기로 한다.

잘 살기보다 어려운 잘 죽기에 대하여

통제력을 잃고 무너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자는 ‘과연 인간이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에 빠진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애잔함을 불러일으키지만, 추하게 망가져가는 육체와 정신 역시 그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긴 생애를 열심히 살아내고, 마지막 길에 들어선 아버지의 육체와 정신은 많은 질문을 던진다. 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며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려 애썼고, 인간의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아버지와 애잔한 교감과 더불어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칠 죽음의 과정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날카로운 사유를 보여준다.

Play 〈해롤드 & 모드〉

연출 : 양정웅
출연 : 박정자(모드), 강하늘(해롤드)

생사를 가로지르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

연극계 대모 박정자와 드라마 ‘미생’으로 주목받은 연기파 배우 강하늘이 연초부터 해롤드 & 모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19세 소년과 80세 할머니가 만나, 소년은 죽음을 동경하고 할머니는 삶을 찬양한다. 젊지만 상처를 입었고, 늙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궁금해 하는 두 인물의 범상치 않은 만남에서 극은 시작된다.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꿈 없이 살아가는 해롤드는 유일한 취미인 ‘남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 매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런 해롤드가 한 장례식에서 유쾌한 80세 할머니 모드를 만난다. 육체는 나이가 들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어린이와 같은 그녀. 모드는 영똥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해롤드의 주의를 끈다. 그리고 얼떨결에 둘은 친구가 된다.

죽음, 삶의 가치를 말하다

‘해롤드 & 모드’는 죽음을 동경하는 소년이 자신의 80세 생일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으려 약을 먹은 할머니를 만나 벌어지는 소동을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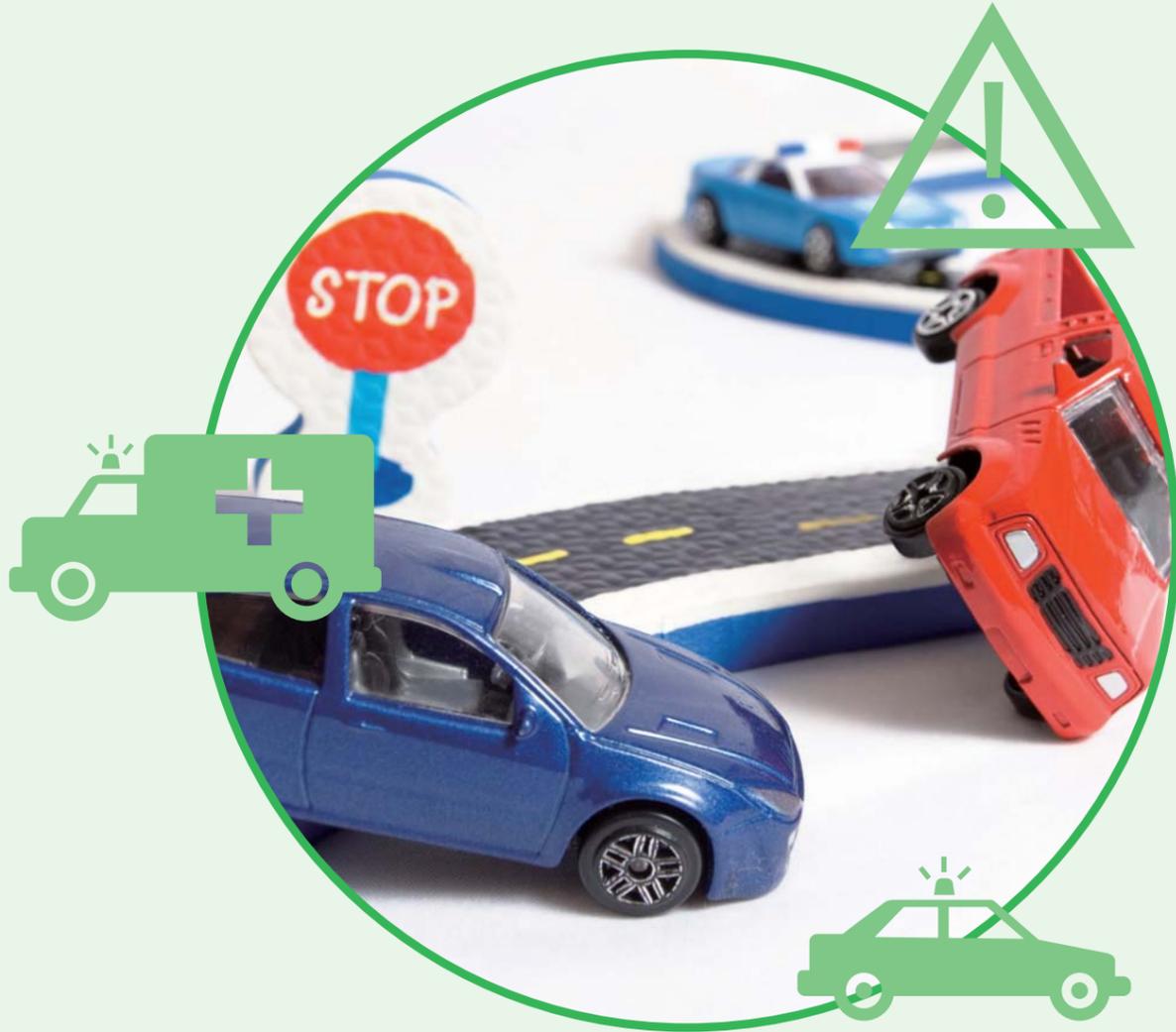
‘삶을 매일 벌어지는 축제’로 응시하는 모드에게 해롤드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모드는 크게 웃으며 답한다. “나는 세상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나에게도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시작이야. 매일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게 내 삶의 목표지”라고.

어느 순간부터 해롤드는 모드의 시선을 자신의 눈에 담기 시작하고, 자유분방한 모드의 일상에 함께하며 싱그러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 시종일관 장난기 넘치는 사건들이 펼쳐지며 웃음을 자아내지만, 슬프도록 아름다운 감동이 이어진다. 해롤드가 연이어 벌어지는 자살 소동을 통해 죽음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쇼’로 간주하며, 죽음의 가벼움을 일깨운다. 한편으로 모드가 꿈꾸는 삶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되짚어보게 한다.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메시지는 기실 딱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쇼를 벌이는 소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할머니,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들어선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늙음과 죽음을 생각하는 소설가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철학의 실체를 여실히 확인하게 만든다. 삶을 곱씹게 하고 죽음을 응시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성찰시키는 두 작품. 이들이 언젠가 힘겨운 이별과 마주할 때, 삶과 죽음을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설마, 내가 뺑소니라고?



2015년 처음으로 신설된 <똑똑! 생활법률>은 살면서 본의 아니게 겪게 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법률적인 면에서 밀도 있게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생활법률 정보를 전하며, 여러 면에서 독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게 '뺑소니'를 하게 되었는데, 도와주실 방법이 없나요? <교통사고 차량 도주(뺑소니) 혐의에 대한 문의>

얼마 전, 제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며 따라오라 하고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 따라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며칠이 지난 후,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며 조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 이긴 하나, 피해자 측에서 추가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사 절차에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해당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도주 사실이 인정되면 법률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입증한 후 처분청에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지면서 따라오라 하고 비상등을 켜 후 천천히 간 점을 강조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자전거로 치고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았는데, 부모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하나요? <교통사고 후 연락처만 주고받은 경우에 대한 문의>

육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학생을 치었습니다. 학생에게 다친 곳이 없다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면서 등교하느라 바쁘다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치인 학생이 미성년자라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사고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전거에 치인 학생이 다쳤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도주 차량(뺑소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외상인지의 여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괜찮다고 했는지의 여부, 사고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해 도주 차량 죄가 적용되는지 결정하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으니 긴급적 치료비·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정리.
윤진아가자



소유에서 거주로!

임대주택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집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면서 자기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그동안 중단됐던 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질적 성장까지 도모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로 주거 불안이 커진 요즘, 무주택 가계의 시름을 달래줄 임대주택 정책 요모조모를 살펴봤다.

'임대주택' 지원정책 속도 낸다

중산층에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뉴 스테이'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중산층을 위해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놓았다. 전세난 해소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희식의 카드다. 뉴 스테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대형 건설사의 고품질 임대 아파트에서 싼 월세를 내며 '방 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살 길이 열리게 된다.

뉴 스테이 정책은 민간임대를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건설 및 매입포함)는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이다. 민간 건설업체 등이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금처럼 임대 계약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사를 고민할 필요 없이 최소 8년간 한집에 살 수 있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연 5% 내에서만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서민주택'으로 불려 왔던 것과 달리, 뉴 스테이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고

급화한 점이 특징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면적 제한을 없애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을 공급한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에 제약이 없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과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50%로 대폭 늘리고, 법인세를 8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화끈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월세 찾는 2030세대 주목!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새롭게 내건 '행복주택' 정책도 올해부터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직장인 평균 소득자라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정도를 모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 고충을 해결하고자 나온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이다. 본격 입주는 올 하반기

부터 시작된다. 시행 초기인 올해 서울의 경우 내곡·삼전·천왕·강일지구가 6월 첫 분양 공고를 내고 8~9월경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준공 전 약 6개월~1년 전에 모집 공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지구의 사업 계획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확정된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 계층이 20%를 각각 차지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 노인·취약 계층·산업단지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및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 행복주택이 건설되거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인근에 위치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총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취업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무주택 가구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 취약층 지원 '사회적 임대주택'

민집을 활용하거나 조합을 꾸려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하는 '사회적 임대주택'이 새로운 임대주택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임대주택은 협동조합과 비영리기업·재단 등이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는 '함께주택 1호'가 있다. 1인 가구 10명이 3층 주택에 모여 사는데, 방은 개인별로 분리돼 있고 거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함께주택협동조합원이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5억 4,500만 원을 용자받아 성산동 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계약 기간 1년에 본인이 원하는 한 별다른 조건 없이 계속 계약을 연장해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올 1월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리모델링 경험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 등을 무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정부도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업이 공급하는 '사회적 임대주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 등 민간임대는 물론 사회적 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의 서민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토지·금융·세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활용과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저리 대출 등이 대표적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세 폐지도 거론되는 만큼 관심 있는 가계에서는 정책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입주식 및 현판 제막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4년 12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입주식에서는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국가 건설을 기원하는 기념 떡 자르기 행사와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이성보 위원장은 입주식에서 “세종청사로의 이전은 단순한 업무 공간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권익위가 더욱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종전 권익위 사무소가 위치한 서대문구 통일로 임광빌딩 신관에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상담센터와 동일하게 고충민원·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상담·접수와 행정심판 청구 상담·접수를 할 수 있다.

전북에서 행정심판 구술청취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12월 18일 오후 4시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했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구술심리에서는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사건, 운전경력 산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면허 제외 처분 사건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진술이 진행되었다.

2015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법제처동 2층 강당에서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권익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권익위 정책에 대한 온라인 기사로 네티즌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부 활동으로는 스토리텔링식의 기사 및 웹툰을 「국민권익」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과 함께 SNS 서포터즈로서 권익위의 SNS 내에서 이슈를 나누고, 빠른 반응(댓글)으로 SNS를 활성화해나가는 것이다.

울산혁신도시 진출입 교통불편 현장 해결



단지 진출입구로 곧바로 좌회전이 가능토록 교차로를 만드는 내용의 교통개선대책(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와 마련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가 없어 1km 이상을 돌아가야 했던 울산혁신도시 70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울산혁신도시 내 ‘에일린의 들 3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동안 아파트 진출입구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1200m 거리를 유턴을 해 돌아가야 했다. 인근 대한불교 선교중 남천암과 농경지 이용자들도 같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3일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계인, LH·국토교통부·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4년 12월 9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한국과 영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서울 페럼타워에서 ‘한-영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1년간 추진해온 ‘한-영 반부패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의 정부·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연사로 참석해 뇌물의 예방, 부정·부패 수익의 환수,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권익위·외교부·UNDP, 반부패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유엔개발계획(UNDP), 외교부와 공동으로 ‘2015 서울 토론회: 한국과 세계의 반부패 경험 공유’ 행사를 1월 29~30일 성북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내외 80여 명의 반부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부패 관련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부패척결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독자 퀴즈

단순한 재사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에서 한 단계 진보한 개념으로, 버려진 재료에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 의류 등을 이용해 새로운 옷이나 가방으로 만들거나,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로 만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해 지렁이 배설물 비료 등을 만드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 □ □ □ □

Hint
〈국민권익〉 0102월호, “일상생활 개념노트” 칼럼이 실린 40~41p 참고

독자의 작은 소리도 들겠습니다

지난 호 정답
국민권익
(국민행복, 민원확산, 권리, 국민권익)

지난 호 당첨자
조혜란(인천광역시 부평구),
조향원(의정부시 민락동),
임지희(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예리(창원시 진해구),
이돈복(부산시 부산진구)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의 한마디

<p>조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p> <p>2014년 권익위의 주요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묵묵히 달려온 그동안의 여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비록 아직은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점도 있지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2015년에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p>	<p>조향원 (의정부시 민락동)</p> <p>올 한해 〈국민권익〉과 함께한 덕분에 속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권익〉과 함께하며 행복한 국민, 청렴한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고 싶습니다.</p>	<p>임지희 (창원시 마산합포구)</p> <p>제가 보낸 독자엽서가 한 장의 연탄이 되어 사랑으로 전해졌다니 뿌듯하고 몽클했습니다. 독자와 〈국민권익〉이 함께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2015년에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p>	<p>이예리 (창원시 진해구)</p> <p>민원확산조기경보제의 성과를 보니 참 현명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전에 미리 막는다는 취지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 사례를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p>	<p>이돈복 (부산시 부산진구)</p> <p>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해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유소년기의 교육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p>
---	--	---	--	---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달려갑니다

전국 140개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1544-1199

직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집단상담 (1:1 맞춤형 상담, 진로상담 등) ○ 취업 정보제공 ○ 취업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식교육, 능력개발교육, 면접교육 ○ 기업위탁 새일역량교육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구인 연계 ○ 인턴십 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 면접동행 	
사후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멘토링 등 직장적응 및 경력개발지원 ○ 사업장 인식개선, 환경개선 지원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보를 한데 모아 ‘일·가정특특’ 모바일 앱!

*출산휴가·출산장려금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유아학비 지원 정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보 등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일·가정특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네이버,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에서 다운가능)

